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21(금) ~ 2023.07.27(목)

제공일시 2023 08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7.21(금) ~ 2023.07.27(목)

제공일시 2023 08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G20 화석연료 감축 합의 불발...사우디 등 반대

- 주요 20개국(G20)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한 채 이번달 에너지장관 회의를 마무리했음
-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성명에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대신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를 원했다고 전했음
-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는 요약문에서 일부 회원국이 탄소 저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축하자고 주장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감소되지 않은(unabated)' 사용량을 억제하자는 데 반대했음
- 하지만 G20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에도 합의하지 못했고, 이번 결과 성명서에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석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AFP통신은 지적했음

(세계일보, 2023.07.23) 윤솔 기자

2.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신설 최대 걸림돌 '환경영향평가' 간소화되나

- 미국 의회가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 법) 시행을 촉진하려고,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국 반도체 생산법안(Building Chips in America Act)'을 추진함
- 애리조나 출신의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법안에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도 지지를 표명하는 등 초당적인 지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켈리 상원의원은 반도체 공장 환경 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가 100% 외국에서 생산된다고 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

(글로벌이코노믹, 2023.07.24) 국기연 특파원

3. 日, 탈탄소 지원대상 확대...기존 원전도 포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내년부터 도입하는 '장기 탈탄소 전원 경매' 제도 지원 대상에 재가동 원전을 포함하여 새로 짓는 탈탄소 전원(電源·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에 원전을 추가할 계획임
- 일본 정부가 원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 업체들이 비용 압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자금 지원에 나섰다 분석이 제기됨
- 해당 제도에 따르면, 전력 회사가 원자력·태양광·수력 등 탈탄소 기준에 부합하는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원칙적으로 20년간 수입이 보장됨 당초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설·재건축 등 '운전 개시 전'이라는 자격을 갖춰야 했지만, 지원 범위를 기존 원전까지 확대한 것임
- 해당 제도는 전력 회사 지원금을 전기 소매 업체를 통해 전력을 이용하는 소비자 등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는 전력 회사들이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안전 대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서울경제, 2023.07.26) 정혜진 기자

1. “삼성도 못 지킬 규정”…ESG 공시 로드맵 뼈격

- 금융위, 금감원이 지난 21일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ESG 펀드 공시기준 도입방안을 각각 공개하기로 했다가 연기하여 추가 의견수렴 이후 8~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함
- 지난달 ISSB는 기후, 지속가능성 관련 ESG 국제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ESG 공시기준 로드맵을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의무화 대상 기업과 연도별 적용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음
- 하지만 업계에서는 1)로드맵 내용은 모호한데, 위반시 처벌은 명확하다는 점 2)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ESG의무공시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3)스코프3 배출량 공시를 과도하게 늦췄다는 점임
- 금융위는 스코프3를 4년 늦추는 로드맵을 검토중임 회계학회에서는 8-9월 금융위의 추가 의견수렴 기간 중에 구체적인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함

(이데일리, 2023.07.23) 최훈길 기자

2. "국내 첫 'ESG 인센티브' 입법화 추진…재계 “정보제공·공시 등 규제 불확실성 제거해야”

- 이르면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본법’이 발의될 전망이다
- ESG기본법의 핵심은 인센티브로, 기업이 ESG를 경영에 반영할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임
- 재계는 ESG기본법이 자칫 ESG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는데, ESG경영을 강제하는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임
- 대표적으로 ESG 공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ESG 정보’에는 핵심 재무정보 등 내부 기밀자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 협력사들이 국내 기업에 요구하는 ‘ESG 정보’가 기업 경영과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헤럴드경제, 2023.07.21) 이승환, 양근혁 기자

(인팩트온, 2023.07.23) 박관희 편집장

3. 환경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지원 강화…업계와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공동 대응

- 환경부가 배터리 산업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배터리 업계와 함께, 스코프 3(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음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함께 27일부터 Scope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했음
- 협의체는 각 사의 산정 방법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터리 산업을 위한 Scope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표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임
- 아울러, 배터리 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치사슬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등 소재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LCI 데이터베이스)을 추가로 구축하고,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내 배터리 탄소배출량 산정방법도 연내 마련하는 등 기업과 소통하며 유럽연합 배터리법에 대응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임

(브릿지경제, 2023.07.26)곽진성 기자

1. 볼보 트럭에 들어간 '무배출' 철강...철강회사들 뛰어든다

- 글로벌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선점하기 위해, 각국의 철강엔지니어링 업체와 협력해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음
- 스웨덴 철강회사 사브(SSAB)의 '하이브리트(HYBRIT)', 포스코의 '하이렉스(HyREX)', 현대제철의 '하이큐브(Hy-Cube)' 기술 등이 대표적임
- 사브는 2026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그린스틸을 생산할 예정인 대표 기업으로, 일본의 대표 철강기업인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소 등은 2030년 30% 탄소감축을 목표로, 공정 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개발 중임
- 포스코는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하이렉스 실증플랜트를 건설하고, 수소환원제철로의 완전한 전환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으며, 현대제철도 저탄소 제품 생산체계 하이큐브 기술 고도화를 통해, 친환경 제철소로 전환하고 있음

(조선비즈, 2023.07.23) 장윤서 기자

2. SAP, 업스트림 공급업체에 2027년까지 제품 레벨 배출량 보고 요청

- SAP는 업스트림 가치사슬의 온실가스를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24년까지 다단계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구축한다고 밝혔음
- 주요 제품에 대해 2027년까지 상위 100개 공급업체가 회사 전체 및 제품 수준의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
- 새로운 계획은 SAP 최고 조달책임자가 발표했으며, 2030년 가치사슬 전체에서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탄소중립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 협력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의 일환임
- 한편, SAP 보고서에 따르면, 스코프3 배출량은 회사 전체 배출량의 97%를 차지함

(ESGToday, 2023.07.24) Mark Segal 기자

3. '기후재앙 대책' IPCC 새 수장에 英교수... "행성 존망 가를 위협"

-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이끌 새 수장에 영국 학자인 짐 스키(69)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가 선출됐음
- 스키 교수는 이날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린 회원국 결선투표에서 90표를 얻어, 69표에 그친 텔마 크루그(브라질) IPCC 부의장을 제치고 의장직을 차지했음
- 스키 교수는 40년 동안 기후과학에 전념해온 인물임 스키 교수는 "기후변화는 우리 행성의 존망을 가를 위협"이라며, "모두 소중히 여기고 모든 목소리를 듣는 IPCC가 되겠다"고 밝혔음
- 그는 ▲ 포용성과 다양성 증진 ▲ 과학적 진실성과 IPCC 보고서의 정책적 유효성 보호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의 효율적 사용 등 3대 우선순위를 제시했음

(연합뉴스, 2023.07.27) 장재은 기자

1. 현대차그룹, BMW·GM·혼다 등과 충전 동맹…북미에 충전소 3만개 짓는다/현대차, '핵심 전략소재팀' 신설…배터리 원자재 수급력 키운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독일 BMW,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일본 혼다와 손 잡고 전기차 충전 동맹을 맺음
- 전기차 수요 급증에 따른 안정적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북미 지역에 3만개 초고속 충전소 신설을 위해 투자하며 완성차 7개 업체 합작사(조인트벤처·JV) 출범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음
- 현대차는 미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로 보조금(NEVI)을 지원받으며, JV는 북미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이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을 만들었음 기획조정실(이하 기조실) 산하에 '핵심전략소재CFT팀'을 신설하여 주로 배터리 원자재를 확보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두고, 상사 기업 출신 인력들을 영입하는 움직임도 포착됐음

(전자신문, 2023.07.27) 김지웅 기자
(인베스트조선, 2023.07.27) 이지은 기자

2. SK E&S, 글로벌 재생에너지 사업 속도…베트남 사무소 개소

- SK E&S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대표사무소 개소하여 베트남 내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관리와 함께 신규 사업 추진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음
- SK E&S는 2020년부터 베트남 남부 닌 투언 지역에 13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 티엔 장 지역에서도 2021년 50MW, 올해 100MW 규모 해상풍력발전소를 준공해 운영 중임
- SK E&S는 또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초 베트남 기업인 GEC와 합작법인 솔윈드에너지를 설립하고 베트남 동남부 띠이닌 지역에 7.4MW 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사업을,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에 756 MW 규모 육상풍력발전소 구축을 추진 중임
- 이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솔루션 사업도 준비 중임

(국모닝경제, 2023.07.23) 이세영 기자

3. LG엔솔, 인도 전기이륜차 업체에 배터리 공급한다

-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월 인도 델리에 판매 법인을 설립한 이후 4개월만에 인도의 전기이륜차 업체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함
-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 판매 법인을 통해, 인도 내수 전기이륜차 업체인 '올라 일렉트릭'과 'TVS 모터'에 배터리팩과 셀을 납품함
- 판매 법인이 배터리를 공급하면, 현지 기업이 이를 배터리팩으로 묶어 전기이륜차 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임
- 인도는 인구 밀도가 높아 승용차보다 이륜차 판매량이 많고, 오는 2030년까지 10배 성장이 예상되며, 파트너사인 올라 일렉트릭, TVS모터는 인도 전기차 시장 1, 2위를 차지하는 규모 있는 제조사로 올 상반기에 시장점유율이 각각 28%, 16%를 기록했음

(브릿지경제, 2023.07.26) 김태준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7.21(금) ~ 2023.07.27(목)

제공일시 2023 08 0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의원들,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원전 재도입

- EU 의원들이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에 원자력을 녹색 기술로 다시 포함시켰음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의 EU의원들은 유럽의회 독일의원, 크리스티안 엘러(Christian Ehler)의 제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유렉티브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3월 초안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은 엘러의 제안에서 EU자금과 규제 특권에 적합한 저탄소 기술의 단일 목록을 도입한 점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유럽에서 저탄소 기술 제조를 촉진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지난 3월 16일에 상정했었음
- 탄소중립산업법의 목표는 EU가 2030년까지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최소 40%를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것임
- 당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두 개를 제안했음. 이는 녹색 산업에 필요한 장비의 유럽 내 제조 목표의 40%와 패스트트랙 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전략적 기술을 탄소중립산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음. 그런데 이 제안은 원자력이 포함되지 않아서 특히 원전을 강조해온 프랑스를 분노하게 만들었음
- 하지만 18일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 사회당(S&D), 보수당(EPP), 국민당(ECR) 및 극우(ID) 그룹의 지원으로 프랑스의 그루들러(Grudler) 의원과 원자력 옹호세력들은 유럽의 녹색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단일 기술 목록에 원전을 포함시킨 것임
- 이 기술 목록에는 재생 에너지 기술, 핵분열 및 핵융합 기술, 에너지 저장,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수소 운송 인프라 및 전해질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목록에 포함될 경우, 인허가를 비롯한 프로젝트 기간이 9~1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하는 패스트트랙 허용절차 등 EU의 전략 기술에만 부여되는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U의원들은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준이 "아직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예를 들어, 인버터, 태양 전지, 음극재 및 배터리용 양극재 등이 EU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하는지 등이 논의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EC는 당초 EU가 2030년까지 기후 및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의 최소 40%를 유럽 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EU 의원들은 이 목표를 전 세계 수요의 25%로 변경하자는 엘러의 제안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음
- 엘러의 핵심 제안 중 하나는 관련 저탄소 기술의 제조 활동을 통합하는 탄소중립산업단지(Net-zero Industry Valley)의 설립임. 엘러는 이 단지가 산업의 시너지를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극대화하면서 산업 재개발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특히 엘러는 탄소중립산업밸리의 부지는 저개발 지역 또는 석탄 채굴 지역과 같은 사회 경제적 전환이 진행 중인 지역에 우선 순위를 줄 것이라고 밝혔음
- EU 회원국들은 6월 말까지 국가에너지및기후계획(NECP)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와 몇몇 다른 EU 국가들은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했음. 유럽 의회의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에서의 공식 투표는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어 11월에 전체 투표가 예정되어 있음
- 한편, EU 국가들은 녹색 전환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이 논쟁하는 가운데,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인팩트은, 2023.07.24) 홍명표 기자